

익산시, 생활물가 잡는다

서민경제 안정 '총력'... 다이로움 혜택 지속·공공요금 동결 등 생활 안정화 도모

익산시가 지역 특색을 살린 물가 안정화 대책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특히 지역화폐 활성화와 공공요금 동결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최근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6개 분야로 이뤄진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골목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미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화폐 다이로움을 확대 발행한다. 하반기까지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적립금과 소비촉진지급금 등 20%의 혜택을 지속 지원해 소비자들이 상승분 완충 효과를 노린다.

하반기 인상을 검토 중이던 상수도 요금을 포함해 지방공공요금 6종을 전면 동결한다. 지방공공요금 6종은 시내버스·택시·도시가스 소매요금

(도 관리 3종),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등이 포함된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를 포함한 가격 동향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건강한 시장경쟁을 유도한다.

시는 마트와 시장 주요 품목 가격과 함께 영등동과 중앙동, 모현동 등 시내 3개 상권을 중심으로 외식비와 이비용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을 조사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생산·유통업체는 시장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높은 물가에도 착한가격을 유지하며 서민경제 안정화에 힘쓰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한다. 해당 업소에 선정되면 100만원 상당의 다이로움 정책 수당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업체가 희망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시는 하반기에 3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해 공공기관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민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농협 하나마트, 로컬푸드 등에 상생 할인행사를 통한 농산물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지역 석유판매업소에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 대책을 총괄하기 위해 5개 부서로 구성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이 가동된다. 종합상황실은 상거래 질서 확립, 농산물 수급상황 점검, 부당한 요금 인상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최근 물가 상황을 감안해 전 부서가 협력해 지역사회 물가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총력 대응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 자치 역량 확대를 위해 시민참여예산 활성화에 나선다.

예산편성 주민 목소리 담다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로 시민과 소통... 제안사업 발굴

익산시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 자치 역량 확대를 위해 시민 참여예산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일 모현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했다.

이날 교육에는 기획, 경제·관광, 복지, 미래농정, 환경·안전, 건설, 청년·문화도시 총 7개 분과로 구성된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52명 위원들과 각 분과위원회 담당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김광원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턴트가 초빙돼 참여예산과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시민참여의 의미와 필요성 △주민참여예산 관련 법령 및 조례 △국내외 주민참여예산의 우

수사례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주민제안사업 및 읍면동 지역현안사업, 지역밀착형 공모사업 등에 참여해 익산시에 필요한 다양한 제안사업 발굴 등 본격적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각 분과위원회는 8월부터 10월까지 제안사업을 모색하고 소관 사업 부서의 면밀한 검토 후 민관협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예산학교는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만큼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예산편성으로 익산시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경로식당 대체식 제공 전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예방

군산시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경로식당을 대체식으로 운영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에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며 노인복지를 실천해 왔다.

5개소(군산경로식당,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나운종합사회복지관, 금강노인

복지관, 예사봉사단)에서 무료 식사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어르신은 약 1,000여명으로 시는 이들에 대한 무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우려에 따라 군산경로식당,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복지관, 군산나운종합복지관이 지난 1일부터 대체식과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대체식제공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독거노인 등으로

코로나19 안정기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권고사항으로 각 기관별 식당이용 인원과 감염 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체식으로 전환 실시하게 됐다"면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복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경로식당 운영은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재운영된 바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

익산시는 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31일째부터 3월 초과 시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 최고 금액이 종전 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대폭 인상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부터 31일이 경과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1차, 2차, 3차 위반시 마다 각각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인상됐다.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를 명령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돼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영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건설기계 사용·운영 중지 명령을 위반해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돼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익산시에는 7월말 현재 기준 건설기계 5,420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면허발급자는 1만6,081명 등록되어 있다.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시에서도 검사유효기간 사전안내와 홍보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익산시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이달 26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상승에도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수한 위생 상태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업소다.

신청대상은 지역 내 소상공인 중 평균 이하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업, 이커머스업, 목욕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다. 다만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1년 이내 휴업한 이력이 있는 업소, 지방세 등 체납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는 제외된다.

현재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13곳, 이·미용업 2곳, 세탁업 1곳, 목욕업 1곳으로 총 17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시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 및 평가를 거쳐 3개의 지정업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건비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은 익산종합운동장 서문 소상공인과의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과의 문의하거나 시청 소상공인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소상공인 위한 상수도요금 4개월 감면

군산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상수도 요금을 오는 11월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4개월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의 상수도 요금에 대해 실시한다.

일반용 및 목욕용, 선박용 수용가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공업용 수용가는 10%를 감면한다. 단, 공업용과 일반용이 같이 부과되는 수용가의 경우 일반용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1만2천여개소, 목욕용 42개소, 공업용 173개소가 해당되며, 감면액은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실시

군산시가 '2022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선정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중 자기결정·의사소통이 어려워 경제활동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이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상담을 해주고 취업을 돕는다.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8월부터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를 선발하고, 참여 중증장애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동료지원가'가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에게 자조활동, 문화활동, 교육활동 등으로 구성된 상담서비스를 최대 10회까지 제공한다.

'동료지원가'에게는 월 60시간 근무 기준으로 급여 87만5천원을 지급하고, 상담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겐 참여수당(1회당 4,500원 최대 10회)을 지급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